

#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24호  
2022-11

2022. 11.

##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6: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기획 시리즈

연일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보도하고 있고,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제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졌듯이 경제위기는 저소득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과 소득구조의 변화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 노동시장에서 내몰리는 중장년층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변화된 복지환경에서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분야와 사람들의 현황, 복지정책의 과제, 발전방향에 대해 복지이슈 focu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3주 간격으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간 일정〉

- 1호(8.31). 경기도 31개 시군 저소득가구 실태와 복지욕구(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2호(09.16). 경기도 청년실태분석(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3호(09.30). 경기도 중장년의 복지욕구(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4호(10.14). 경기도 청년 정책분석(강현철 경기대학교 교수)
- 5호(10.30). 경기도 중장년 정책분석(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6호(11.11).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 연구진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hsmin77@ggwf.or.kr)

공동연구 | 이성욱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seonguklee@ggwf.or.kr)

## ■ 목차

- I. 들어가며
- II. 경기도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 III.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55 Fax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 ■ 연구목적: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모색

- 경기도 청년들의 실태와 청년정책의 현황을 바탕으로 마지막 3호에서는 향후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 경기도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080)으로 분류된 총사업은 15,936개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청년관련 사업은 358개로 전체 복지사업의 2.25% 수준에 불과
- 정합성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광역정부(경기도) 주도의 청년정책
  - ② 특정 유형(현금수당) 중심의 청년정책
  - ③ 소외형 중심의 청년정책
  - ④ 청년의 정책 수요와 경기도 자체 청년정책의 정합성은 낮은 수준
  - ⑤ 모호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 구분
-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청년들의 정책 수요(needs)를 통해 효율적·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향후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
  - ② 시급성과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결정
  - ③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의제 발굴
  - ④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시군의 역할 분담

## I 들어가며

### ■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청년 시리즈 3: 발전 방향과 과제

- 앞선 복지이슈 FOCUS에서는 경기도 청년들의 실태와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특징과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청년은 「청년기본법」제정 이후 연령기준이 만 19세~34세로 규정되고, 최근 대통령 및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거부권자(veto player)로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전 생애와는 달리 삶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최근 높은 부동산 경기 및 고용불안정의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는 연령대로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청년의 실태와 함께 청년의 이질성과 동질성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
    - 청년은 노인 및 중장년과는 다른 MZ세대 등 청년층 전반을 아우르는 동질성을 보이는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이질성을 보이는 양면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취업, 결혼 및 출산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집단을 정책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다른 광역정부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넓고 다양한 시군의 특성에 따라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집단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의 특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31개 시군들은 조례 등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청년지원조례」 및 31개 시군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청년 사업은 특정 분야(복지)·특정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의 발굴과 성과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시점
- 경기도 청년들의 실태와 청년정책의 현황을 바탕으로 마지막 3호에서는 향후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청년 시리즈 마지막인 3호(전체 6호)에서는 그동안의 분석과 논의를 종합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정책 욕구(needs)와 현 청년정책의 정합성을 종합·분석
  - 또한 경기도와 시군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구분하여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경기도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 ■ 사회복지예산(080)으로 분류된 경기도 및 시군 정책(사업)분석

-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080)으로 분류된 총사업은 15,936개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청년관련 사업은 358개로 전체 복지사업의 2.25% 수준에 불과
  - 지방재정 365의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자료(2021.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총 복지사업 수는 15,936개로 나타나고 있음
    - 자료 중에서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반환금, 예치금, 예비비 등과 업무추진비 등은 실제 사업예산이 아니기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0원으로 나타나거나, 중복된 사업명도 제외하여 분석
  - 이 가운데 청년관련 정책은 358개로 전체 사회복지 사업의 2.25%에 불과한 실정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서 사업명에 대한 분류기준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 및 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른 분야(일반공공행정, 교육, 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항목에 분류된 청년관련 정책(사업)이 높은 비중은 보이지 않아 대략적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은 전체 복지정책의 약 3%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자원별(국고/광역/기초) 기준과 함께 사업유형별(현금수당/이용자 지원/시설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세밀한 분석이 필요
    - 자원별 구분은 해당 청년 사업의 주도적 역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사업유형별 구분은 청년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 특성 1: 광역정부(경기도) 주도의 청년정책

- 본청 및 시군의 복지예산으로 분류된 청년정책을 자원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본청은 자체 사업, 시군은 광역보조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본청 사업수는 21개, 총예산은 2,56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의 총 사업수는 337개, 총예산은 2,045억 원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본청의 경우 순수광역 청년정책은 전체사업의 71.4%, 예산 비중은 88.2%에 이르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사업수는 자체 사업이 평균 41.9%에 이르고 있으나 예산 비중은 15.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시군의 청년정책은 사업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을 의미하며, 기초단위에서는 주요 청년 정책이 국고보조사업 중심(사업수 비중 42.6%, 예산 비중 28.5)으로 이루어짐을 의미
- 또한 광역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 비중(12.1%)에 비해 예산 비중은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본청)의 청년정책으로 인한 시군의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
- 시군 합계와 시군평균이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닌 31개 시군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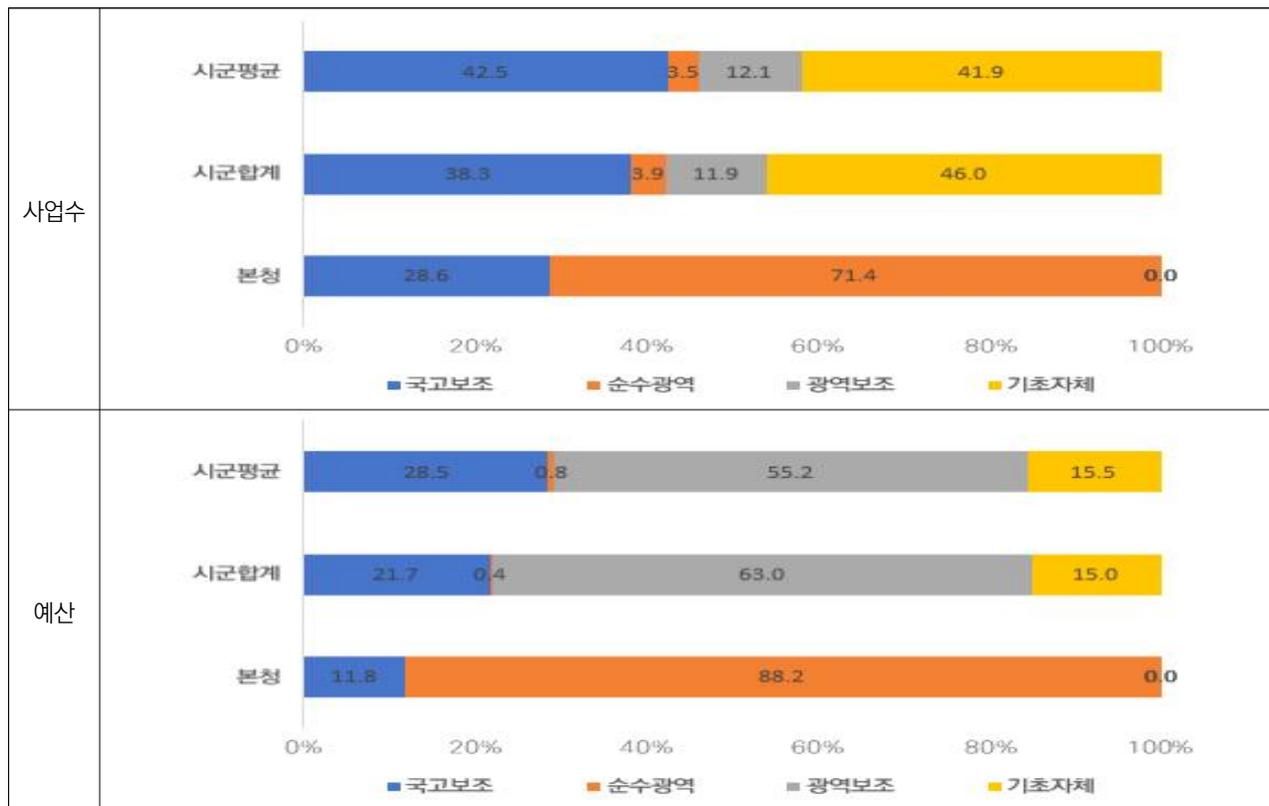
〈표 1〉 경기도 및 시군 청년정책 자원별 구분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총계		국고		광역				기초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순수		보조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본청	21 (100)	256,906 (100)	6 (28.6)	30,432 (11.8)	15 (71.4)	226,474 (88.2)	0 (0)	0 (0)	0 (0)	0 (0)
시군 합계	337 (100)	204,504 (100)	129 (38.3)	44,298 (21.7)	13 (3.9)	745 (0.4)	40 (11.9)	128,821 (63.0)	155 (46.0)	30,640 (15.0)
시군평균	10.9 (100)	6,597 (100)	4.2 (42.5)	1,429 (28.5)	0.4 (3.5)	24 (0.8)	1.3 (12.1)	4,156 (55.2)	5.0 (41.9)	988 (15.5)

자료 : 지방재정 365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2021.12.31. 기준)에서 재계산

〈그림 1〉 경기도 및 시군 청년정책 자원별 비중: 사업수 및 예산 기준



## ■ 특징 2: 특정 유형(현금수당) 중심의 청년정책

- 청년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별(현금수당, 이용자지원, 시설지원)로 구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은 현금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별 구분기준은 OECD SOCX 구분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마련한 민효상 외(2021)의 기준에 따라 ①현금수당, ②이용자지원, ③시설지원 등으로 구분
    - 현금수당: 최종 수혜자에게 ‘현금’이라는 수단으로 전달되는 급여를 의미
    - 이용자지원: 시설지원과 현금수당을 제외한 사업
    - 시설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법적 근거(법령 및 조례)에서 ‘시설’로 분류한 곳에 대한 예산을 의미
  - 경기도 본청의 경우 현금수당(58.8%)과 이용자지원(40.4%)이 전체의 9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청년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설지원의 규모는 매우 적게 나타남
  - 시군의 경우에는 현금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시군평균-59.3%), 최근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청년센터 등에 대한 시설지원도 본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군의 경우 현금성 수당 비중은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이용자지원이 낮은 이유는 국고보조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과 광역보조사업(청년기본소득 등)의 예산이 높기 때문으로 나타남
    - 시설지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과 함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센터 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시설지원의 비중이 본청보다 높게 나타남
    - 결국 지방 대응비가 존재하는 현금수당의 경우 예산을 축소할 수 없기에 시군에서는 이용자지원의 예산 비중을 줄여 시설지원과 관련한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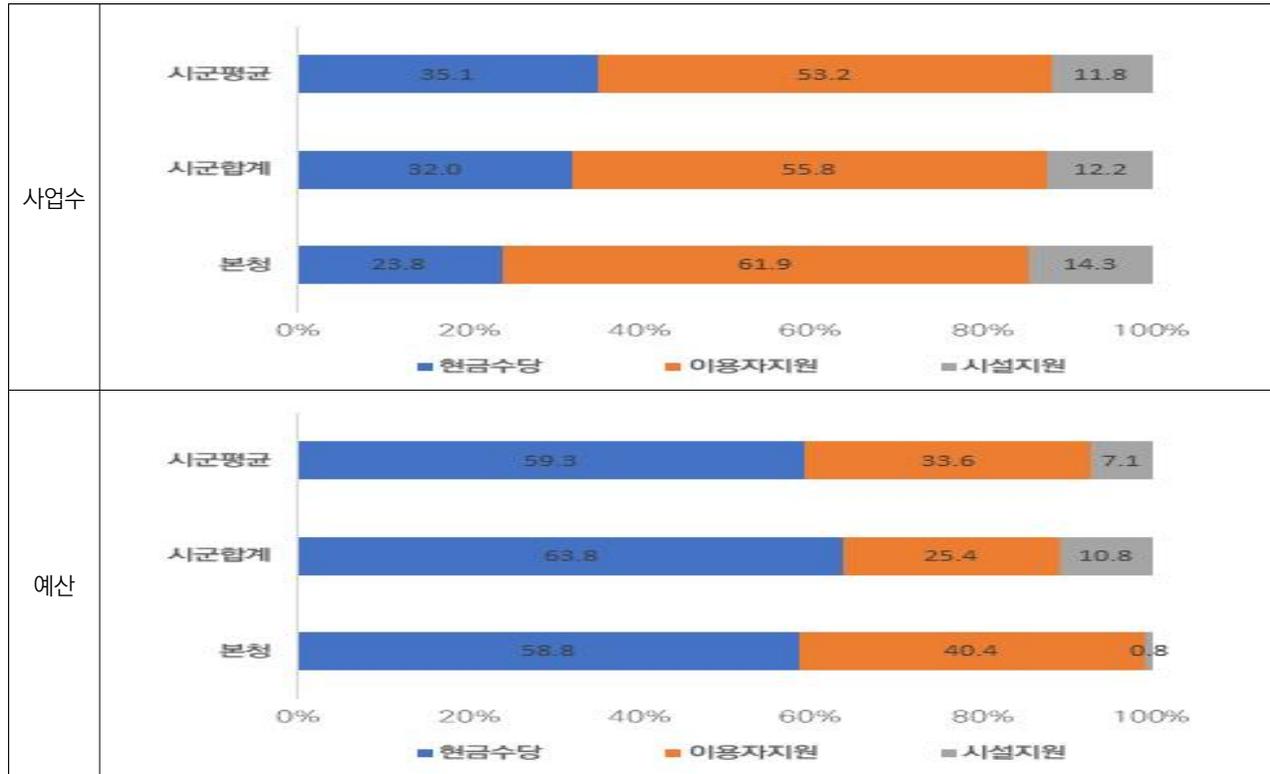
〈표 2〉 경기도 및 시군 청년정책 유형별 구분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총계		현금수당		이용자지원		시설지원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액 (비율)
본청	21 (100)	256,906 (100)	5 (23.8)	151,143 (58.8)	13 (61.9)	103,736 (40.4)	3 (14.3)	2,027 (0.8)
시군 합계	337 (100)	204,504 (100)	108 (32.0)	130,496 (63.8)	188 (55.8)	51,910 (25.4)	41 (12.2)	22,098 (10.8)
시군평균	10.9 (100)	6,597 (100)	3.5 (35.1)	4,210 (59.3)	6.1 (53.2)	1,675 (33.6)	1.3 (11.8)	713 (7.1)

자료: 지방재정 365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2021.12.31. 기준)에서 재계산

〈그림 2〉 경기도 및 시군 청년정책 유형별 비중: 사업수 및 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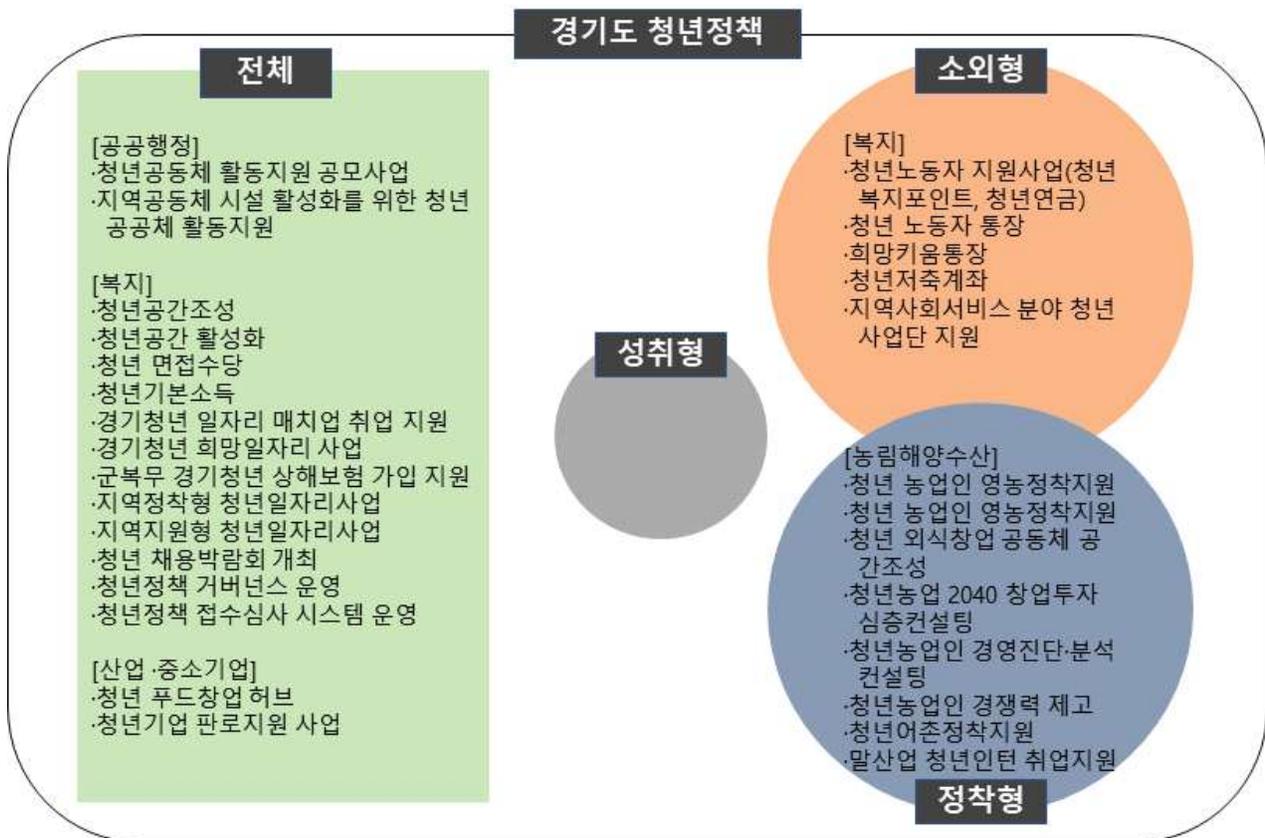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광역정부 주도로 현금수당성 사업(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통장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 특징 3: 소외형 중심의 청년정책

- 청년의 유형별로 청년 사업을 재구분하면, 성취형에 대한 배려가 부족
  - 청년기본소득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군 복무 상해보험은 20대 남성 청년이 대상이라는 특정 연령(대) 중심 사업
    - 그러나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만 34세임
  - 다른 청년정책은 공동체 및 공간 등 이용자 중심과 창업 판로지원, 취업준비생 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
  - 성취형의 경우 고학력·상대적 고소득자로 볼 수 있으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문제, 결혼 및 출산, 문화·여가 등에 대한 지원은 성취형이라고 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단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에서도 문화·여가 정책은 거의 없으며, 결혼 및 출산, 주거지원 등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대부분임

〈그림 3〉 경기도 청년유형별 청년정책 분류



■ **특징 4: 청년의 정책 수요와 경기도 자체 청년정책의 정합성은 낮은 수준**

- 경기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청년정책은 주거지원,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보충적 성격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
- 그러나 청년들의 정책 욕구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확대가 필요
  - '21년 기준 중앙정부 청년정책 관련 총예산은 308개 사업에 23조 8,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반면 '21년 기준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정책 총 사업수는 358개, 총예산은 4,614억 원으로 나타나 경기도 청년 수(전국 청년 인구의 약 30%)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
  - 저출생지원정책에서도 중앙정부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1년 기준 중앙정부 예산은 46.7조 원, 지방정부는 총 3.56조 원에 불과한 실정임
    - 경기도의 경우 저출생지원사업의 82%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자체 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

- 도내 시군 간 청년정책의 차별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청년위원회 등 네트워크 조직 및 청년센터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아래 <표 3>은 시군별 자체 청년정책을 정책영역별로 구분한 것임
    - 시군별로 청년정책을 사회복지(080)예산에 포함 또는 미포함 시키는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본 분석에서는 사회복지(080)예산만을 기준으로 분석
  - 중앙정부의 사업인 대학 일자리센터 등과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부문에 자체 청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책 욕구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결혼·육아, 문화·여가, 건강 등의 정책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시군별 청년정책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청년정책 차별성은 크지 않음
- 청년실태분석 결과에서 경기도 청년의 유형화에 따라 필요정책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도 선호하는 정책 욕구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민효상 외, 2022)

**<표 3> 시군별 자체 청년정책(사업) 정책영역별 현황**

구분	일자리·경제	주거·교통	결혼·육아 / 문화·여가 / 건강	청년공동체 등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군복부상해보험 가입지원</li> <li>• 교교취업활성화·일자리매치업·청년 채용박람회 개최·청년면접수당·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공간활성화·청년정책거버넌스·청년지원사업단 운영</li> </ul>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활동공간 조성</li> <li>• 청년지원센터 운영</li> </ul>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일자리센터·인턴사업·실직자희망지원금·학자금부채경감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주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공간 조성</li> </ul>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일자리센터·취업지원·디지털교육공간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희망뉴딜프로젝트공모·청년주간 행사·청년정책사업원정대·청년정책아카데미·디지털청년정책웹툰영상제작</li> </ul>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구·뉴딜 일자리 사업·청년기본소득지원·일자리창출지원·청년취업 지원·학자금부채경감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지원센터운영</li> </ul>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지원·구직활동지원·청년인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공간지원·청년정책거버넌스운영지원</li> </ul>

구분	일자리·경제	주거·교통	결혼·육아 / 문화·여가 / 건강	청년공동체 등
부천시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청년네트워크 운영·청년정책활성화
남양주시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안산시	• 대학생행정체험연구 운영·청년사업가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청년인턴사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평택시	• k-move와 연계 청년해외취업지원·대학생 인턴사업·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 지원·면접정장무료대여·일자리 창출사업·창업자 금융지원·청년층 인턴사업·청년창업센터운영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구직자교통비	• 청년 마음건강 및 생활상담 지원	• 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청년정책공모사업·청년지원센터조성 운영·청년정책기반구축
안양시		• 사회초년생작은방지원		
시흥시	•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청년친화기업 조성		• 청년문화예술 기반조성	
김포시	• 온라인청년학교 운영·자격증 응시료 지원·청년지원포털 희망캠퍼스 조성			• 구래청년지원센터 운영·사우청년지원센터 운영·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파주시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청년창업자임대료지원·청년취업성공지원패키지·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청년창업지원(대표먹거리, 핵심점포)		• DMZ파주 희망캠프	• 청년위원회운영·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의정부시	• 도예공방 조성 및 운영			
광주시	• 청년창업 보금자리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 추진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	• 장애청년챔버오케스트라·면접정장대여사업·대학생 아르바이트·청년카페지원사업			• 광명 청년의 날·청년생각 펼침 공모사업·청년동운영·청년정책 워크숍
하남시	• 면접정장대여사업			• 청년해냄센터운영·청년관련 위원회
군포시	• 청년날개 인턴십			
오산시	• 대학일자리센터·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청년역량강화·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청년일자리 카페 유접스			• 청년활동 지원

구분	일자리·경제	주거·교통	결혼·육아 / 문화·여가 / 건강	청년공동체 등
양주시				• 청년동아리 지원·청년정책위원회
이천시	• 대학일자리센터			• 청년활동공간조성·청년지원정책위원회운영·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청년활동네트워크 운영
구리시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청년창업센터운영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참여기구운영
안성시	• 대학일자리센터·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			• 청년공간조성
의왕시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			• 포일센터 운영 • 청년공간사업
포천시	• 대학일자리센터·청년역량강화지원			• 청년정책운영 • 청년활동지원
양평군	•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청년일터 취업 및 창업공간 조성			
여주시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청년활동협의체 운영
동두천시	• 면접준비청년패키지지원			• 어수정 청년공간 운영·지역주도형 참여청년 지원·청년동아리 활동지원·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과천시	(청년정책지원)			
가평군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연천군	•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			• 내일스퀘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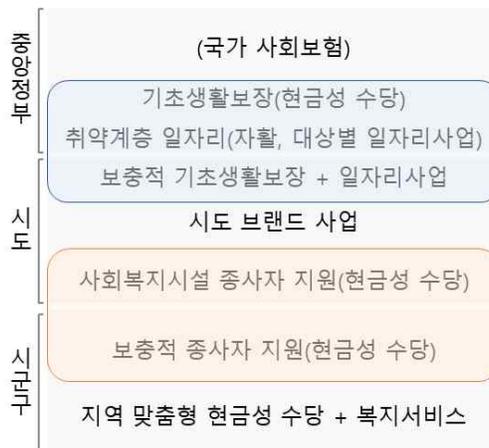
자료: 자료:지방재정 365 세부사업별 세출예산(2021.12.31. 기준)에서 발췌

## ■ 특징 5: 모호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 구분

- 정부간관계론의 입장에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청년정책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지역정착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금수당성 성격의 사업(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면접수당, 군 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은 광역정부(경기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 청년기본소득은 기초정부(시군)에서 지방 대응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청년노동자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면접 수당, 군 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은 전액 도비로 지원

- 기초정부(시군)에서는 중앙 및 광역정부의 보충적 성격의 일자리(취업)과 관련한 청년정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 청년정책은 두드러지지 않음
- 일반적으로 복지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 광역, 기초정부 간 보충·보완적 관계로서 동일한 대상과 지원목적을 가진 복지사업이 다수 존재(정홍원 외, 2020)
  - 복지 사무에 대한 주체별 구분을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무가 중복적으로 편제되어 시행하고 있는 공통사무가 많이 존재
  - 이러한 결과로서 동일한 대상과 내용의 복지사무가 중앙/광역/기초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중복이 아니라 보완 또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광역정부는 중앙정부의 보충적 성격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정부는 광역사업의 보충적 성격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4〉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자료 : 정홍원 외(2020. p145)에서 인용

- 그러나 경기도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정책적 공백 또는 새로운 정책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 복지 사무의 정부 간 역할 배분과 다른 점이 나타남
  -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정착형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은 정책적 목표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보충적 성격의 사업은 부재한 상황
  - 오히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경기도 사업을 확대·확장시킨 경우도 존재(청년자산형성사업 등)하여 청년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청년정책과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수혜 불가 등으로 인해 경기도 청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시군의 청년정책은 보충적 성격보다는 중앙 및 광역정부 청년정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자 및 공간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광역-기초정부 간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
  - 시군의 자체 청년 사업은 사업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 규모 또한 매우 적음
  - 지역 주도형·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같은 경우 자체 사업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추가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
    - 지역 주도형·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획은 기초정부에서 하고 중앙정부는 비용만 보조해주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 실제 진행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및 직무교육 등 지원이 대부분으로 나타남(경기도 고시 제2022-58호 참고)
  - 또한 일부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주거지원과 관련한 청년정책은 거의 없으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의 사업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140 코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청년'을 키워드로 분석하였을 때 거의 없는 실정임
    - 또한 청년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090 코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비 사업인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임
    - 결혼 및 출산 지원은 사회복지(080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보육·가족 및 여성(084 코드)임
-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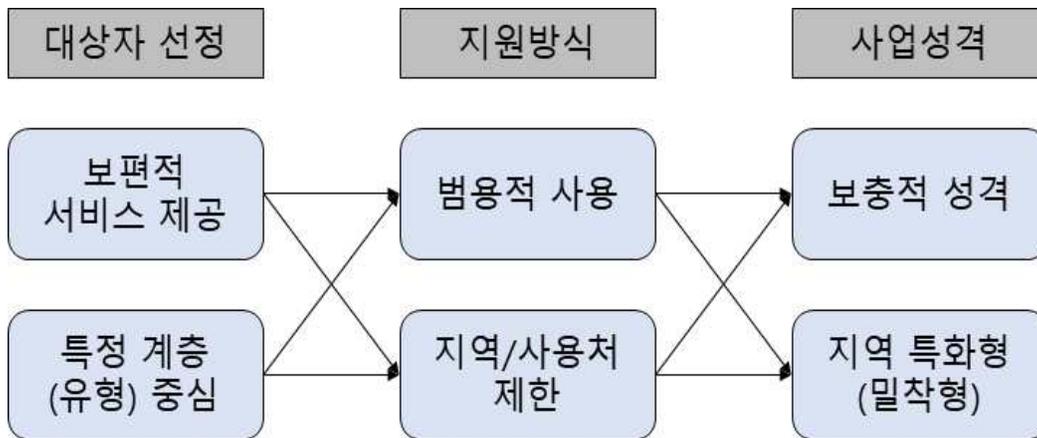
## Ⅲ 경기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 맞춤형 청년정책 설계

- 청년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①대상자, ②지원방식, ③지원 형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우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관점과 특정 계층(유형) 중심을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경기도 청년정책을 예로 들면 연령대(청년기본소득), 특정 계층(군 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면접수당) 등과 같이 특정 대상자 전체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으로 설계 가능
    - 또한 자산조사나 특정 업종 중심(청년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지원 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으로 설계 가능
    - 이러한 보편 서비스와 선별 서비스의 선택 문제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문제가 아닌 해당 사업의 정책적 목표와 예산 상황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지원방식에 대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용처의 구분이 없는) 방식 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한적 사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청년기본소득 등의 현금수당성 정책과 청년저축계좌, 청년노동자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은 사용처에 대한 구분이 없는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자지원과 같은 서비스 중심은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방식임
  -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식은 정책적 목표와 예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의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대상자 및 지원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세 번째로는 중앙 및 광역정부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또는 지역 특화형(밀착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영역에서 중첩된 영역을 두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진행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임
    - 이에 청년정책 또한 정책 수요가 높으나 중앙-광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지역 특화형(밀착형) 정책 모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보충적 성격으로는 최근 시군에 많이 설치된 청년센터와 같은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도-시군 간 역할 분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생활 서비스와 같은 청년정책은 지역 특화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은 지역 특화형(밀착형)사업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도의 정책적 사업의 지방 대응비로 인한 시군 재원 부족으로도 볼 수 있기에 역할조정 등을 선행하여 시군의 자체 청년정책 재원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

〈그림 5〉 청년정책의 방향성 설정



## ■ 시급성과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결정

-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재분류하여 정책영역별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구체적인 도구(tools)를 의미하여, 일반적인 정책 수단의 분류체계는 다양한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활용
  - 정책수단론의 대표적 학자인 Salamon(2002)은 정책 수단의 특성을 ①강제성, ②직접성, ③자동성, ④가시성으로 구분하고, 직접성과 강제성을 중심으로 13가지 정책 수단을 유형화
  - 청년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기존의 정부 조직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기에, 또한 비용 부담과 수혜자가 명확하기에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성과 함께 정책적 시급성을 기준으로 정책 수단을 유형화

〈표 4〉 경기도 청년정책 육구 수단별 유형화

구분	구분	직접지원	환경조성
경제	(단기)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소액 저이율 대출	
	(장기)	- 주거비지원 - 교육비지. 학자금지원 - 자산형성	- 신용회복 교육 - 금융설계 교육
주거	(단기)	- 전·월세 대출 지원	- 치안 수준 강화
	(중장기)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셰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확대	- 저렴한 주거지 확대 - 임차인보호제도 - 부동산 정보제공
문화여가	(단기)	- 여가문화 비용지원 - 문화행사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개선	
	(장기)	- 청년문화 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 -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공간 확대	- 문화공간의 접근성 높이기 - 분야별 전문가 확보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소모임 지원 강화
결혼육아	(단기)	- 높은 결혼 비용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결혼에 대한 직장 성차별 대책
	(장기)	- 출산육아비용 지원 - 적정규모 주택공급	- 경력단절 방지대책 -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건강	(단기)	- 청년건강검진 의무화 - 지속적 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장기)	-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 운동프로그램 확대 - 고립 방지를 위한 인적 관계망 강화 - 소모임 지원 강화

## ■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의제 발굴

○ 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청년 네트워크(협의체, 위원회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주도형으로 청년정책의 의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

- 정책의제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정책문제를 의미하며,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검토 및 논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Cobb & Elder(1983)는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대해 '촉발장치로 인해 표출된 사회적 쟁점이 정부의제로서 결정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동일시 집단)의 사회문제가 다수의 관심을 받는 공중의제,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정부의제로 발전
- 청년정책은 그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관심에 머물렀으나, 최근 대통령 및 지방정부의 장(長) 또한 정책대상자로 관심을 가지는 정부의제로 발전

-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접근양상(주도 세력)의 차이에 따라 ①외부주도형, ②동원형, ③내부 접근형 등 3가지로 나뉘게 됨
  -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특성상 정책결정자(동원형) 및 정책결정자나 측근(내부 접근형)에 의해서 정부의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청년정책 또한 외부주도(청년층)로 의제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는 대부분 청년 네트워크 조직(위원회, 협의체 등)이 청년지원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어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청년정책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경기도는 청년지원사업단의 청년참여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 청년들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군의 청년조직에서는 시군 맞춤형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

## ■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시군의 역할 분담

- 경기도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청년정책'의 발굴과 육성, 시군의 청년정책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 경기도는 다른 광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이 필요
    - 김동연 지사의 새로운 청년정책(공약사항)에 대한 사업의 구체화와 실행,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수정 등을 지속하여 새로운 경기도만의 브랜드 청년정책을 설립해야 할 시점임
  - 또한 경기도는 광역정부로서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을 지원할 책무가 있기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운영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가 필요
    - 중간지원조직은 서비스의 직접 전달보다는 다른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 대한 기여 등을 효과적으로 추구(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Shea, 2011)
    -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여론 형성 및 정책의제 설정에서부터 네트워크, 평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지원사업단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까지 기능으로 열거하고 있음
- 시군의 청년정책은 정부 간 역할 분담에 따른 논리구조를 차용하여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의 설계와 보충적 성격의 청년정책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

- 정부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에서는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은 중앙정부, 일상생활 서비스와 같이 지방분권(독립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그림 6〉 정부별 복지사무유형 및 근거

복지사무유형	근거	담당주체
일상생활서비스	독립성 원리 (지방분권)	기초정부
사회기반투자	보충성 원리 (정부간 협력)	광역정부 (현금성 부담)
기초생활보장	보편성 원리 (전국적 평균)	중앙정부

- 다만 지방정부인 광역과 기초정부 간에는 큰 논의가 없으나 민효상 외(2018)연구에서는 복지 사무 배분 기준에 대해 ①규정 적용사무, ②도 견인사무, ③기초생활 보장사무, ④사회 기반 투자사무, ⑤일상 생활 지원 사무, ⑥시범사업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방정부별 역할과 보조율 기준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종합적·통일적 관점에서 도 견인정책 및 기초생활과 관련한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시군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확대되고 있는 청년공간(센터)와 관련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운영비 지원정책도 보충성 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타당
- 시군은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해 청년정책을 시행
- 아래 표는 청년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청년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을 유형화하고, 해당 시군에서 필요정책 분야가 높은 것으로 분류한 것임
  - 정책영역별로는 취창업지원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수를 보이는 청년 유형별로는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하남시와 과천시와 성취형 청년 인구가 높음에도 취창업지원이 높은 응답이 나타난 곳으로 이 지역에서의 취창업지원은 성취형에 맞는 비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여주, 오산, 안성과 같은 지역은 정착형 청년 인구가 많음에도 취창업지원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정착형 취창업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지원과 같은 경우는 남양주, 구리, 의왕, 동두천, 가평 등 소외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저소득·중저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 또는 금융컨설팅과 같은 청년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안양(결혼·출산 지원), 용인, 화성, 광주(문화·여가 지원) 등은 자체적인 청년정책의 확대가 필요

〈표 5〉 경기도 시군별 청년정책 확대 필요 분야

구분	취창업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결혼 출산 지원	문화여가 지원	청년 간 관계망 강화
성취형	하남, 과천		수원, 성남, 평택	안양	용인, 화성, 광주	
정착형	여주, 오산, 안성	포천	이천			
소외형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군포, 양평	남양주, 구리, 의왕, 동두천, 가평	고양, 김포, 파주, 연천		양주	시흥
합계	11	6	8	1	4	1

## 참고문헌

민효상·이성욱(2022). 『경기도 청년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Elder, C. D., & Cobb, R. W. (1983). 『The political uses of symbols』. Longman Publishing Group.

Salamon, Lester M.(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지방재정 365. “2021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apply/sd002_be202.xml)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24

##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6: 경기도 청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주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http://ggwf.gg.go.kr)

현장공감  
복지재단

